

## OECD Employment Outlook - 2007 Edition

Summary in Korean

### OECD 고용 전망 - 2007년판

국어 개요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 국가 약어)는 현재 세계 경제의 중요 주체다.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노동시장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각국의 노동인력 상태에 관해 논한다.
- 금번 보고서에서는 세계화로 OECD국가 근로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살펴본다. 이 영향이 크게 과장된 면이 있는가 하면 고용시장의 불안정 및 불평등 심화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잖이 있다.
- 또한 금번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 자금조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OECD국이 실시하는 실업자 근로유인책 등을 살펴본다.

OECD 고용전망 은 고용 관련 핵심사안을 매년 조사해 낸 결과다. 2007년판은 다음 사항을 다룬다:

## BRICs 노동시장

BRIC국가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는 세계 GDP대비 비중이 90년도17%에서 현재 1/4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OECD국의 주요 경제파트너가 되었다. BRIC경제의 미래 성공여부는 자국의 노동시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자료상의 제약과BRIC국가의 비공식 경제규모로 인해 이들 시장을 수월히 조사하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특징 및 추세로 정의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고속성장**이 고용을 이끌어 왔다. 새천년의 첫 5년간 BRICs 전체가 창출시킨 새일자리는 매년 2200만개였으며 이에 비해 OECD 전체는 370만개였다.

**불완전 고용**수준은 여전히 두드러진 상태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의 도심지역은 실업률이 8-9%대에 이르며 인도의 도심지역은 약간 덜한 정도다. 불완전 고용수준이 특히 높은 경우는 브라질과 인도는 여성, 러시아는 장년 근로층, 중국과 인도는 농촌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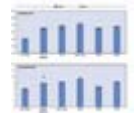
공식적으로 신고가 안 되어 사회보장제도에 기여치 않는 비공식 고용은 러시아를 제한 나머지 국가에서 널리 퍼진 관행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브라질은 총고용의 절반 정도가 이 경우에 속하며 인도는 약 85%나 된다.

**임금 불평등**은 중국, 인도에서 심화되었고 나머지BRICs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숙련 근로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국제경제 통합과 함께 국내 저숙련 근로자들의 상대 임금수준이 높아난다고 보는 일반 교역론에 모순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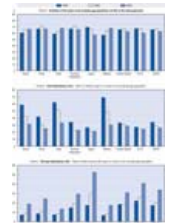
중기에BRICs국이 겪게 될 현저한 **인구노령화** 현상은 신규 근로자 공급을 제한할 것이다. 노동력 증가율이 앞으로 15년 동안 인도에서는 더디어지고, 브라질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중국은 사실상의 침체를 겪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를 제한 나머지 BRICs는 중기에 **교육수준**이 뚜렷이 늘어날 것인데 실로 러시아 숙련노동은 이미 OECD국 수준을 앞지른 수준이다. 이에 반해 브라질, 인도, 중국 교육수준은 크게 미달된 정도다. 이들 3개 국에서 늘어나는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요건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육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1.2] BRICs과 OECD 지역 고용률 및 실업률



[그림 1.7] BRICs와 OECD지역 인구구조



## 일자리는 더 많으나 생산성은 떨어진 상태?

근로층 비율(노동활용) 확대와 근로자당 생산(노동생산성) 확대가 1인당 GDP 성장을 유도하는 요소다. 2006년 OECD일자리정책 재성명을 통해 고용 증가와 실업 감축을 유도하는 다수의 노동시장 일괄정책을 새로이 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미국, 영국에서와 같이 시장 원리에 의한 노동시장정책만이 노동활용과 노동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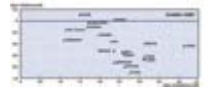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노동시장정책은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의 근로자를 위한 엄격한 **고용보장제도**는 생산성이 높은 신생 산업으로의 근로자 이동을 제한하면서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숙련자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다는 점이 이 점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 관대한 **실업수당**은 실업자들이 각자 직업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높은 위험과 높은 생산성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면서 생산성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가족친화정책** 또한 자녀 있는 부모를 근로인력으로 유지케 하면서 생산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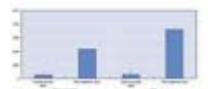
고용정책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면서 측정상의 생산성 수준을 어느 정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평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근로자 생산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OECD 고용전략 재성명에 주창된 정책방안이 생산성 증가에 저해됨을 **뚜렷이 입증시킨 사례는 없다**. 사실상 1인당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잖으며 고용 증가 같은 사회적 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림 2.2] 노동활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



[그림 2.7] 육아휴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세계경제에서 OECD 근로자들은 점점 취약한 입장인가?

세계화 즉 전세계적인 교역 자유화는 OECD 국민소득을 늘렸다. 예로 교역 개방도가 10%p 확대된 OECD 국가는 1인당 소득이 4% 가량 늘게 된다.

이로 보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한 **국민여론은 큰 양면성을 띤다**. 실로 세계화를 통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증가를 보았던 반면 저숙련자 등 일부 근로자들은 상황이 덜 나아졌으며 현재 OECD 국민들은 세계화로 급료에 압박을 받고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실제로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정당화되나?

지난 몇 십년간의 교역 심화로 OECD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악화됐다는 사례가 적잖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일부 있다. 첫째 세계화 영향을 기술 변화나 구조개혁에 따른 영향과 분리하여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둘째 세계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인식된만큼 크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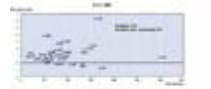
세계화가 근로층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근로자의 기술 수준에 어느 정도 좌우된다. 역외 아웃소싱은 고용 근로자 총합계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나 기업들이 가장 일상화된 생산단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저숙련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세계화는 국내정책개혁, 기술변화 등과 마찬가지로 급료와 노동수요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한 요인의 한 가지며 실제로 급료와 노동수요는 경제 충격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게 되었다.

이 변화의 지표로 활용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1980-2002년 사이 절대치로 0.2에서 0.5로 증가를 이루었는데 이는 이동성과 적절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중요시하는 더 활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을 뜻한다. 실로 외국경쟁 강화로 인해 직업 전환이 빈번해진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임금소득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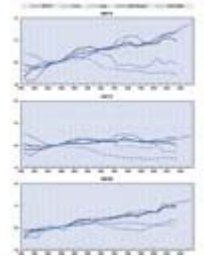
[그림 3.6] 임금 상승 및 교역 개방도와와의 관계



줄었으며 급속도로 감소한 국가도 더러 있다. 소득간 격차도 더 악화된 상황이나 이는 최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보다는 10분위 최고소득층의 소득 급증으로 초래된 상황이다. 세계화가 이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 소득분포상의 변화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엘리트로 부상한 소수의 근로자 및 투자가가 세계화의 이익을 보면서 나머지 인구층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맞서 정부당국은 규제, 고용, 사회보장 등의 사안을 포함한 **일괄정책**을 개발하여 점점 활발해진 노동시장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에 특별히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림 3.8] 1980년 이후  
10개 OECD국의 소득불평등



### 사회보장 재정조달: 고용효과

OECD국에서 대부분이 보건과 연금에 활용된 사회보장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비중이 평균 1/4 정도다. 이러한 지출은 그 규모와 (일반조세 또는 소득세, 고용주·고용인 기여금 식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지출비용 자금조달은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급료와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 간에 **격차**를 만드는데 이 격차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또 한편의 근로자 및 고용주가 내는 사회기여금으로 나타낸다. 보통 조세격차가 클수록 노동시장이 받는 영향도 크다. 그렇지만 실질적 영향은 다음의 3가지 요인에 주로 달린다.

**조세 혼합:** 공적사회보장제도의 자금조달은 집단적 차원에서 확고히 모색할 이유가 있으며 예로 보건의 일반조세를 통한다. 이에 반해 사회기여금은 실업보험, 연금제도처럼 노동시장 상태와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제도의 자금조달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 소비세에 더해 이왕이면 환경세, 재산세까지 포함시킨 일반조세를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조세격차를 줄이고 재정 차원의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안은 신중히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어느 선택도 절실한 사회지출제도의 운영개선을 대체하진 못한다.

**누진과세:** 조세격차는 낮은 급료직 고용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이는 더 두드러진다. 이 때에 고용주 기여금의 감축 시행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이는 대규모의 자중손실을 수반하기 쉽고 아울러 과도한 감축은 중요한 자금조달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버는 근로자 소득의 3개 구성원인 최저임금, 노동조세, 근로유인 수당 간에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절대필요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다 누진적인 자금조달 출처로의 움직임이 권할 만하다.

**세금과 수당 간의 연계성:** 세금 지불과 수당 수급 간의 뚜렷한 연계성 구축은 조세 격차의 영향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로 고용인이 순소득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연금 증대 차원에 뚜렷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순소득의 감소를 수락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건 등의 수많은 사회제도가 갖는 뚜렷한 집단적 성격으로 인해 이 분야에는 큰 한계가 있다. 다른 예를 들어 고용주는 급료 지불을 하고, 조기퇴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한 기업 내력에 연계시킴으로써 노동력 관리를 제고할 수도 있다.

## 실업자 활성화를 위한 각국 방안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실업자들의 활발한 구직활동과 고용성 제고를 도모하면서 이들의 재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의 공통요소를 갖는다: 초기부터 실업자와 고용상담자와의 정기적 접촉, 가용일자리와 구직노력의 정기적 보고, 공석 일자리 직접 알선, 각 개인의 활동계획 수립, 구직자의 의욕상실 및 직업능력 상실이 없도록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s) 소개.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방안은 어떻게 시행하나? OECD는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실업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질문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바 우선 이 분야에서 국가마다의 관행이 무척 다양하고 또한 각국에서 활용된 정책수단이 가지각색이면서 그 수 또한 크게 늘어나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실업자는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대개 경우에 직업소개처에 등록을 해야 한다. 요컨대 구직자의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직업 이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각 구직자별로 직업안내소의 맞춤형 알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등록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도 전에 실업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맞출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자들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지 또는 여전히 실업 상태인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자들이 고용상담자와의 철저한 면접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 및 면접의 빈도는 크게 다르다. (너무 드문 경우라고 보는) 구직자가 공석 일자리에 보내지는 경우, 장기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하는 빈도에도 유사한 차이가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실업자의 모니터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더 신속한 재취업을 장려할 것 같지만 피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 요컨대 실업자는 자신에게 안 맞는 일자리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엄격한 구직 모니터링과 “근로우선”정책 실시가 지속적인 실업 퇴치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고용 안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알맞게 맞추는 것도 절대필요 사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장기 실업자에 유용하다고 입증되었음에도 몇 국가만이 OECD 권고사항을 따라 상기 정책에의 가담을 의무화했다. 물론 국가들이 이러한 결정을 고용상담자 재량에 맡기려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실업자들에게는 실업 기간의 연장과 함께 국가 개입이 더 수시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